

별첨

#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

2020. 4. 16.

금 융 위 원 회  
금 융 감 독 원

## 목 차

<b>I. 검토 배경</b>	<b>1</b>
<b>II. 금융규제 유연화 기본 방향</b>	<b>2</b>
<b>III. 세부 방안</b>	<b>3</b>
1. 자본 적정성 규제	3
2. 유동성 규제	7
3. 자산 건전성 규제	11
4. 면책 등	12
<b>IV. 기대 효과</b>	<b>15</b>
<b>V. 향후 계획</b>	<b>16</b>
[별첨1] 금융업권별 기대 효과	17
[별첨2] 세부 방안별 조치 필요사항 및 적용 기한	20

## I. 검토 배경

- G20,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
 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, 각 국은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강화된 금융규제 체계(바젤Ⅲ\*)를 도입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적용 중
    - \* 은행 최소자본비율 강화, 유동성비율 규제 ·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등
  - 그 결과, 위기 상황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향상된 반면, 금융규제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위기 대응을 위한 탄력성은 저하
  - 이러한 점을 감안, FSB는 각 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각국도 유연화조치 발표
    - \* (금융안정위원회(FSB)) 각국의 권한당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현행 국제기준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권장 (3.20)
    - \* (美 FRB, EU ECB) 위기상황에서 실물경제 지원기능 제고를 위해 은행이 유동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동성비율이 규제비율을 하회할 수 있다고 발표
-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필요성이 제기
  -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권 중심으로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(100조원+@규모)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 중
  -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·유동성규제 등 금융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요청 중
    - \* (예) 은행의 경우 채안·증안펀드 출자,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유동성비율(LCR)이 하락

⇒ 국제 동향 및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

## Ⅱ. 금융규제 유연화 기본 방향

### < 기본 원칙 >

<b>① 필요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“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” 적용</li> </ul>	<b>② 한시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칙적으로 <b>한시적 유예</b>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</li> </ul>
<b>③ 신속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적극적 법령해석 등 <b>시행 가능한 조치</b>부터 先추진</li> </ul>	<b>④ 효과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<b>현장애로 적극 해소</b></li> </ul>

### < 주요 방안 >

자본 규제	유동성 규제	영업 규제 등
·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	·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	·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
·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	·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	·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
·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	·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	·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
·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	·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	·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 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

### < 기대 효과 >

◇ 코로나19에 대응하여

금융회사의 **재무건전성을 유지**하는 가운데,

- ①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**실물경제**에 대한 **금융지원 확대** 및 ②**금융시장 안정**에 **기여**할 수 있는 금융회사 역량 강화

### Ⅲ. 세부 방안

#### 기본 원칙

- ◇ **(필요성)**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“**필요한 규제에 한하여 필요한 수준으로**” 적용
  - \*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금융시스템과 관련한 핵심적·본질적 규제 유연화는 지양
  - \* 실물경제 지원 규모, 건전성 현황 및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금융 업권별로 유연화 수준을 차등 적용
- ◇ **(한시성)** 위기지속시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**한시적 유예** 적용
  - \* (상황 종료시) 원상회복에 **충분한 유예기간** 부여
  - \* (상황 지속시) 유예기간 **연장**, 유연성 **확대**, 필요시 **영구적** 규제 완화
- ◇ **(신속성)** **시행 가능한 조치**부터 우선 추진
  - 적극적 법령해석, 법령상 정부의 규제유예 권한 등 정책수단 **활용**
- ◇ **(효과성)**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면책 등 **현장으로 적극 해소**
  - 규제유연화가 금융회사의 적극적 역할로 연결되도록 사전·사후 관리

#### 가

#### 자본 적정성 규제

#### ① [공통\*]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 경감

- \* 은행, 증권, 보험
- 증권시장안정펀드(이하 “증안펀드”)에 참여하는 은행, 보험사,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펀드출자에 따른 자본부담\*을 우려
  - \* “출자금액×위험가중치(위험값)”에 비례하는 수준의 추가 자본적립 의무 발생
- ➡ 적극적 유권해석(은행), 신속한 규정개정(보험, 증권)을 통해 증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자본적립 부담을 경감
- **(은행)** 특정 경제분야 지원(주식시장 안정) 목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주식 보유 대비 1/3의 위험가중치 적용 (300%→100%) [법령해석 발급(4월)]

< 현행 규정 >

- 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함이 원칙  
→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이라면 300%(상장주식 위험가중치)의 위험가중치 적용
- 다만, 예외적인 경우\* 상장주식의 위험가중치를 100%로 적용할 수 있음  
[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[별표3] 134.바(2)]
- \* ①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②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해 보조하고  
③ 정부의 감독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 
절차에 따른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

- (보험,증권) 증안펀드의 특수성\* 등을 고려하여, 증안펀드  
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  
(보험 : 8~12% → 6%, 증권 : 9~12% → 4.5~6%) [시행세칙 개정(4월)]

\* 정책적 지원(세제혜택 등)이 수반되어 일반적인 ETF 투자에 비해 손실발생  
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

## 2 [은행] 「바젤Ⅲ 최종안」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 조기 시행

-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  
방법 등을 개편하는 「바젤Ⅲ 최종안」\*을 '23년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

\* BCBS, "Basel III : Finalising post-crisis reforms" ('17.12월)  
· 당초 이행시기를 '22년까지로 권고('17.12월)하였으나 최근('20.3.27일) '23년까지로 연기

-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은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준수  
부담을 경감\*하여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 확충에 기여할 전망

\* ① 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 하향조정(무담보:45%→40%, 부동산담보:35%→20%),  
②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(100%→85%) 등

➡ 「바젤Ⅲ 최종안」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이행기한  
보다 앞당겨 '20.2분기부터 시행('20.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적용 가능)  
[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(4.8일)]

\* 조기 시행으로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이 0.8%p 상승  
['18년말 기준 은행별 자체 추정 내용을 집계한 결과(금감원)]

### ③ [은행] 시스템적 중요은행\* 선정대상에서 소규모 지방은행 제외

\* D-SIB: 바젤Ⅲ 규제 중 하나로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은행 및 은행지주 회사에 추가자본적립의무를 부과

○ 현재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소속 자은행을 규모와 상관없이 D-SIB으로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(1%p) 부과

\* 은행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지주사가 D-SIB으로 선정된 경우 자은행들도 일률적으로 D-SIB으로 선정

➡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\*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(1%p) 면제[감독규정·시행세칙 개정(6월)]

\* 은행지주 소속 자은행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도를 별도 평가하여 중요도가 낮은 자은행은 D-SIB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변경

### ④ [은행] 「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」 시행시기 연기

○ 바젤위원회는 거액여신에 따른 편중위험 완화를 위해 '19년부터 「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」\*를 시행할 것을 권고 ('14.4월)

\*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%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'19.3월부터 행정지도 실시하고 규제화 시기 검토 중

- 은행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도에 근접한 기업에 대한 여신 축소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

➡ 은행들의 기업자금 공급 제약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정식규제 시행 시기를 '21년 이후로 연기

\*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, 기업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,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결정

## 5 [증권]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\* 규제 완화

\* 순자본비율(NCR)=[영업용순자본-총위험액(보유자산×위험값)]/필요유지자기자본

- **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금은 0%~32%**(거래상대방 위험값 적용), **일반 증권사의 대출채권은 100%의 위험값 적용**

\*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의 200%이내(신용공여 추가한도 100%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한정)에서 기업 직접 대출 가능

일반 증권사는 기업 직접 대출은 불가능(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은 가능)하나 대출채권·사모사채 매입은 가능

-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

➔ **9월말까지 신규 취급\*한 기업(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) 대출채권에 대해 만기(최대 2년)까지 위험값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\*\***

\* 만기 도래분에 대한 만기연장 또는 재취득의 경우도 포함

\*\* (1)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 위험값 하향조정(0~32%→0~16%)[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(4월)]

(2)증권사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채권(대출금·사모사채·매입대출채권)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(위험값 100%)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 위험값(0~32%) 적용[금융투자업규정 개정, 금융위 의결(4월)]

- 특히, 일정 규모 내\*의 **중소·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위험값 하향 조정**[100%→0%~32%(거래상대방별 신용 위험값 적용)] [금투업규정 개정(6월)]

\* 예 : 일반 증권사 자기자본의 50% 이내

## 6 [지주]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한시적 완화

- **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%로 제한\***

\*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: 자기자본의 10%  
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: 자기자본의 20%

- **코로나 19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지주사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확대 필요성 제기**



➡ 코로나19로 자금이 부족한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\*를 한시적으로 확대\*\*[감독규정 개정, 금융위 의결(5월)]

\*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: (자기자본의) 10% → 20%  
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: (자기자본의) 20% → 30%

\*\*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

## 나

### 유동성 규제

#### ① [은행]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\*) 한시적 완화

\* 고유동성자산 /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≥ 외화 80%, 통합 100%

○ 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(3.19, 3.24)등에 참여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지원 중

- 은행이 보유중인 고유동성자산을 위기대응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LCR 규제비율을 한시 완화할 필요

\* 미국·EU 등의 금융당국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은행이 실물경제 지원 과정에서 LCR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것을 허용

➡ 금융위의 LCR규제수준 변경권한\*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, 외화 LCR, 통합 LCR 규제비율을 '20.9월말까지 하향 조정

- 외화 LCR : 9월말까지 80%에서 70%로 인하

- 통합 LCR : 9월말까지 100%에서 85%로 인하

\*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LCR 규제비율을 변경할 수 있음  
[은행업감독규정 26조(원화 LCR), 63조의2(외화 LCR)]

## 2 [은행] 예대출\*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

- \* 원화 대출금(가계대출×1.15+개인사업자대출×1+법인대출×0.85) / 원화 예수금 ≤ 100%
- 은행의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과정에서 대출규모가 증가할 경우 예대출 준수가 어려울 가능성
  - 특히, 소상공인(개인사업자)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등 법인대출에 비해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약할 우려
- ➡ '21.6월말까지 5%p 이내의 예대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발급
  - \* 위반시에도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의 제재 면제(비조치의견서), 경영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의무 경영공시 대상이 아님을 확인(법령해석) (4월)
  - 아울러, 금년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하향 조정(100%→85%) [은행업감독규정 개정(5월)]
  - \* 단,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·법인 대출 중 "신규" 주택임대업·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동일수준(115%)으로 항구적 상향 조정

## 3 [산은] 순안정자금조달비율(NSFR\*) 한시적 적용 유예

$$* \text{NSFR}^{(1)} = \frac{\text{안정자금가용금액}^{(2)} (\text{부채, 자본} \times \text{가중치})}{\text{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}^{(3)} (\text{자산} \times \text{가중치})} \geq 100\%$$

1) 순안정자금조달비율 : Net Stable Funding Ratio  
 2) 안정자금가용금액 : 부채·자본항목 중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은 자금  
     → 소매예금: 95% 인정, 채권: (만기 1년 미만) 50%, (만기 6개월 미만) 0% 인정  
 3)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: 자산항목 중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

- 산은은 코로나19 관련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에 따라 산금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자금을 공급
  - 채권은 소매예금과 달리 안정자금 인정비율이 높지 않아 대규모 산금채 발행 이후 산업은행의 NSFR이 하락할 전망
- ➡ 산은의 특수성\*을 고려하여 '21.6월말까지 10%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
  - \* 「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」에 따라 시중은행 대비 대규모 자금을 공급 중이며 전체 부채 중 산금채를 통한 조달비중이 높음

#### 4 [보험] 채안·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허용

○ 채안·증안펀드에 출자하는 보험회사가 RP 매도를 통해 출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불분명

- 현행 규제\*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만 차입을 허용

\*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

➡ 채안·증안펀드는 수익 목적이 아니라 시장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유동성 유지 목적이 인정된다는 법령해석 발급(4월)

#### 5 [보험]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

○ 보험업권은 법규상 유동성 관련 규제비율은 없으나, 경영실태평가(RAAS) 항목 중 하나로 평가

\* RAAS(Risk Assessment Application System) 계량평가 중 유동성 평가 지표

유동성비율	유동성리스크비율
$\frac{\text{유동성자산(잔존 3개월)}}{\text{평균지급 보험금(3개월)}}$	$\frac{\text{발생가능한 지급보험금}}{\text{유동성자산+보완유동성자산*0.3}}$

-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채안·증안펀드 출자 참여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 평가 기준의 한시적 유연화 필요

➡ 9월말까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(2~4등급 및 일부 5등급 → 1~4등급 부여)

## 6 [여전, 저축] 유동성비율\* 한시적 적용 유예

\*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/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 $\geq 100\%$

-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로 유동성 자산이 예측치 않게 감소하여 유동성비율 위반 가능

➡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\*으로 인한 10%p이내\*\* 위반에 대해 '21.6월말까지 불이익\*\*\*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 발급(4월)

\* 4.1일 발표한 「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지원대상

\*\* 추후 만기연장 상황을 보아가며 조정 가능

\*\*\* (여전) 경영개선조치, (저축)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

## 7 [저축, 상호] 예대율\* 한시적 적용 유예

\* 대출금 / 예수금  $\leq$  (저축은행) '20년: 110%, '21년: 100% (상호금융) 80~100%

-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로 규제비율에 근접한 일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조합의 예대율 준수가 어려울 가능성

➡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\*으로 인한 10%p이내\*\* 위반에 대해 '21.6월말까지 불이익\*\*\*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 발급(4월)

\* 4.1일 발표한 「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지원대상

\*\* 추후 만기연장 상황을 보아가며 조정 가능

\*\*\* (저축·상호)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

## 다

## 자산 건전성 규제

### ① [공통\*]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유지

\* 은행, 보험, 여전, 저축, 상호

-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·상환유예 조치에 따라 대출 건전성 분류 하향\*(충당금 적립) 및 미수이자 수익 인식 가능성\*\*을 우려

\*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채권가치 감소가 경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“고정 이하”로 분류(은행업감독규정)

\*\*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음(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)

➡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①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(충당금 추가 적립 불요)할 수 있고, ②미수이자를 회계 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법령해석 발급(4월)

\*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

### ② [여전]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

- 현행 여전업감독규정은 “폐업중인 개인사업자”에 대한 채권을 일률적으로 “고정 이하”로 분류하도록 규정

- 이에 따라, 연체이력이 없고 상환능력이 충분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“폐업 중”이라면 무조건 “고정 이하”로 분류

\* 반면, 저축은행·상호금융권은 해당 개인사업자의 연체이력, 다른 소득 유무 등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“요주의 이상”으로 분류 가능

➡ 폐업중인 개인사업자라도 미래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 가능하도록 개선 [여전업감독규정 개정(5월)]

## ① [공통\*] 재난상황시 업무처리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강화

\* 은행, 보험, 여전, 저축, 상호, 금투 등

-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“제재에 대한 우려없이” 적극적으로 피해기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

➡ 면책 대상, 요건, 절차에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면책시스템을 구축\*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[검사및제재규정 개정 (4.16)]

\* (대상) 재난상황에서의 피해기업 지원 등을 명확하게 면책대상으로 지정  
(요건)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이 없으면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
(절차)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신청권 보장 등

## ② [공통\*] 경영공시·보고 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 면제

\* 은행, 보험, 여전, 저축, 상호, 금투 등

- 코로나19로 금융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법령상 경영공시·업무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

- 특히, 소규모·단일점포가 많은 금융회사의 경우 임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, 점포 폐쇄 등으로 기한 미준수 가능

➡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공시·업무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\*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

\* 기관·임직원 행정처분, 과태료 등

### 3 [여전]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\* 확대 및 산정방식 개선

\* [총자산 - 차감항목(온렌딩대출)] / 자기자본 ≤ 6배

○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의 영향으로, 현 레버리지 한도하에서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등 정상 영업에 애로 발생 우려

➡ 카드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(6배→8배)

- 다만, 레버리지 사전관리 유도를 위해 7배 이상 도달시 이익 배당 등 자기자본 감소행위를 제한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  
· 감독을 강화

- 또한,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총자산 계산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 적용\*[여전업감독규정 개정(7월)]

\* 가계대출 115%, 기업대출 85%(비카드 여전사에도 적용)

### 4 [보험] 대면채널 모집시 전화모집(TM) 절차 준용 허용

○ 현행 보험업법령은 대면채널 모집시 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, 청약서 자필서명 수령을 위해 계약자를 최소 1회 이상 대면 하도록 규정

-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, 소비자의 대면접촉 기피, 대면영업 자제 권고 등에 따라 대면채널이 급격히 위축

➡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·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 설명의무, 자필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 허용[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]

\* 단, 녹취내용 점검, 청약철회기간 연장(+45일)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

## 5 [저축] 영업구역內 의무여신비율\* 한시적 적용 유예

\* 구역내 개인·중소기업에 대해 신용공여 일정비율(수도권 50% 기타 40%) 유지 의무

-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영업구역外 대출을 6개월 이상 만기연장함에 따라 영업구역內 의무여신 비율을 위반할 가능성

➡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\*으로 인한 5%p이내 위반\*\*에 대해 '21.6월말까지 불이익\*\*\*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 발급(4월)

\* 4.1일 발표한 「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지원대상

\*\* 추후 만기연장 상황을 보아가며 조정 가능

\*\*\*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

## 6 [정책금융기관] 적극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- 정책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해 자금공급 규모를 확대

- 기존 예산안을 초과한 자금공급 업무 수행으로 예산 집행<sup>①</sup>과 경영평가<sup>②</sup>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

\* ① '19년말 既확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 집행하는 경우 경영평가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(금융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)

② 금융지원 관련 비용증가와 손실로 인해 수익성지표 평가 등에서 저득점 가능 (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)

➡ (예산집행) 업무증가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등으로 예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'20년 경영평가 시 감안하여 평가하고

- (경영평가) '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수익성 지표 등을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 평가

[ '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 개정(4월) ]



## IV. 기대 효과

### 1. 금융권 전체 자금공급 여력 206~394조원 증가

- 자본부담 경감,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으로 금융업권의 자금 공급 여력이 206~394조원 증가

#### < 금융업권별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 >

업권	방안	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
은행	예대율 한시적 완화(5%p), 바젤Ⅲ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	71.6조원~259조원
증권사	기업 대출채권 위험값 한시적 하향조정	8.6조원
카드사	레버리지 한도 확대(6배→8배)	54.4조원
저축은행	예대율 한시적 완화(10%p)	6.6조원
상호금융	예대율 한시적 완화(10%p)	65.1조원
합 계	-	206.3~393.7조원

### 2. 기타효과 : 5대 은행이 계열사에 12.9조원 추가 신용공여 가능

- 지주사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\*로 5대 은행이 계열사에 12.9조원 추가 신용공여 가능(현행 18.5조원 → 완화시 31.4조원)

\*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: (자기자본의) 10% → 20%  
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: (자기자본의) 20% → 30%

#### ※ [별첨1] 금융업권별 기대효과 참고

## V. 향후 계획

□ 비조치의견서, 법령해석 등 법규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이행

○ 법규 개정 필요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 추진

(※별첨2: 세부방안별 조치 필요사항 및 적용 기한 참조)

□ LCR, 예대율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前 연장·보완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

○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\*을 부여

\* 한시적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시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포함

□ 한편, 금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\*하고

○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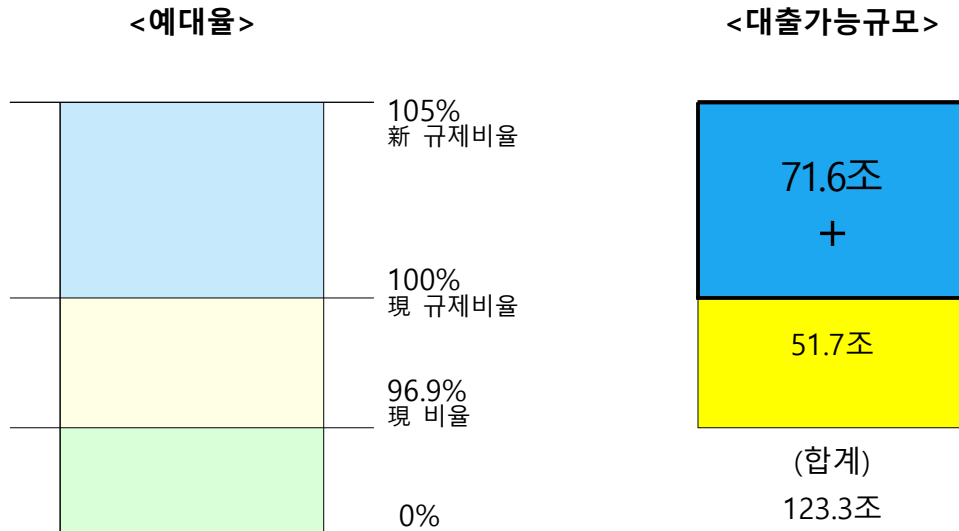
\* 예컨대, 금융회사는 일정 범위의 예대율 기준 위반에 대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초과 사유(코로나19 대응) 등 관련자료는 금감원에 제출해야 함

## 별첨1

## 금융업권별 기대 효과

가. 은행 : 자금공급 여력 **71.6조원~259조원** 증가

□ (예대율 한시적 완화(5%p)) 자금공급 여력 **71.6조원** 증가



□ (바젤Ⅲ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) BIS비율 평균 0.8%p ↑ → 자본여력 12.5조원 ↑ → 자금공급 여력 **259조원** 증가

< BIS 자기자본비율 >		<자본버퍼 >	<자금공급가능규모>
0.8%p	바젤Ⅲ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효과	12.5조원 <sup>1)</sup>	259조원 <sup>2)</sup>
+		+	+
3.8%p	초과자본	114.0조원	2,359조원
1%p	D-SIB추가필요자본		
2.5%p	자본보전완충자본		
8%p	최소필요자본		

- 1) '19년말 은행 총자본: 238.2조원, BIS비율: 15.25% → BIS비율 0.8%p에 해당하는 총자본 = 12.5조원  
 2) 추가자본버퍼×12.5배[최소필요자본비율(8%)]÷60.4%[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('18말)] = 259조원

## 나. 증권사 : 자금공급 여력 8.6조원 증가

□ (기업 대출채권 위험값 한시적 하향조정)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 8.6조원 증가

	현행 공급 규모	자금공급 증대가능 규모***
① 종투사 기업 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	6.2조원*	6.2조원
② 증권사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	2.4조원**	2.4조원
합 계	8.6조원	8.6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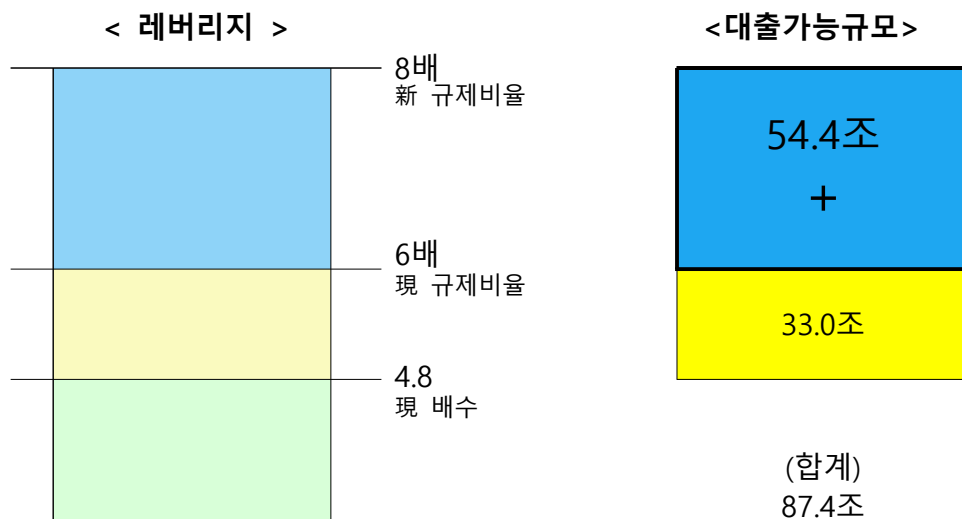
\* '19.2월말 기준, 부동산 관련 대출 제외

\*\* '19.9월말 사모사채·대출채권 매입 기준

\*\*\* 위험값이 50%이상 하향조정됨에 따라 증권사 또는 종투사의 관련 자금공급 총액이 2배로 증가한다고 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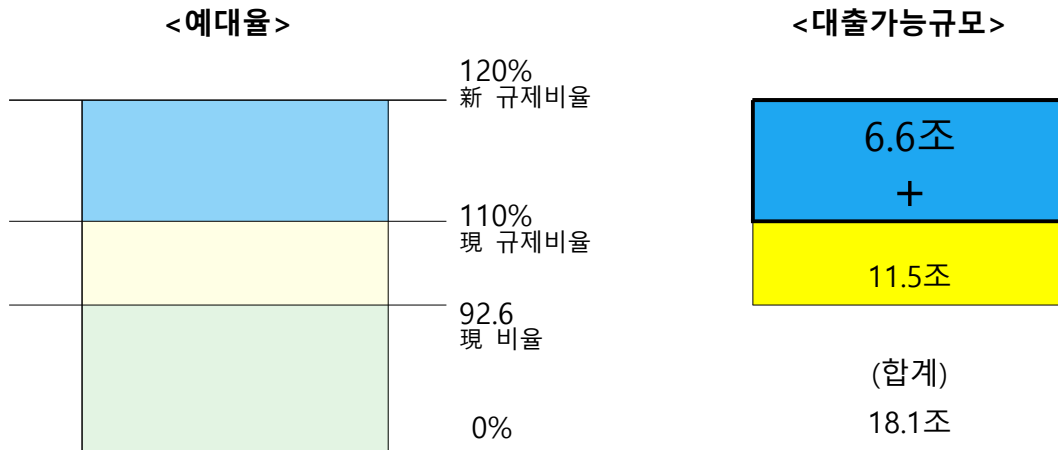
## 다. 카드사 : 자금공급 여력 54.4조원 증가

□ (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(6배→8배)) 자금공급 여력 54.4조원 증가



## 라. 저축은행 : 자금공급 여력 6.6조원 증가

□ (예대율 한시적 완화(10%p)) 자금공급 여력 6.6조원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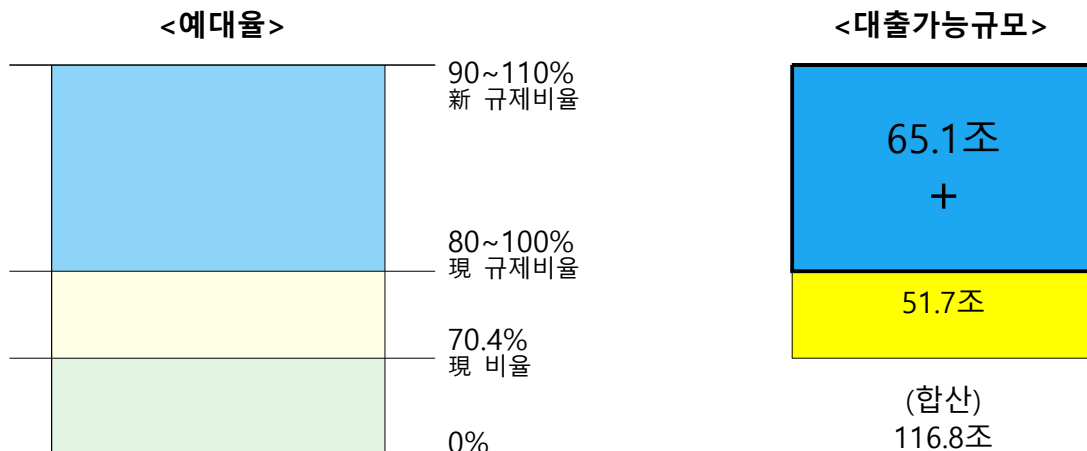
## 마. 상호금융 : 자금공급 여력 65.1조원 증가

□ (예대율 한시적 완화(10%p)) 자금공급 여력 65.1조원 증가

(단위 : 조원, %)

구분	'19.12월				대출여력 증가
	대출금(a)	예수금(b)	예대율(a/b)	현재 여유한도(0.8*×b-a)	예대율 10%p완화 시(0.1×b)
신협	69.7	97.0	71.9	7.9	9.7
농협	248.5	348.4	71.3	30.2	34.8
수협	20.5	28.3	72.2	2.2	2.8
산림	4.4	7.1	62.8	1.2	0.7
새마을	126.0	170.3	74.0	10.2	17.0
합계	469.2	651.1	70.4	51.7	65.1

\*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에 따라 예대율 규제비율이 상이(80%, 90%, 100%)하나 효과산출을 위해 현재 예대율 규제비율이 80%로 동일하다고 가정



**별첨2**
**세부 방안별 조치 필요사항 및 적용 기한**

업권	세부방안	조치 필요사항	적용 기한
<b>가. 자본 적정성 규제</b>			
공통	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	(은행) 법령해석(4월) (보험·증권) 시행세칙 개정(4월)	-
은행	「바젤Ⅲ 최종안」 조기 시행	시행세칙 개정(4월)	-
은행	D-SIB에서 소규모지방은행 제외	감독규정·세칙 개정(6월)	-
은행	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연기	-	-
증권	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	시행세칙 개정(4월)	~'20.9월 신규 취급 대출
	증권사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	금투업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(4월)	~'20.9월 신규취급대출채권
	증권사 중기대출 위험값 하향조정	금투업규정 개정(6월)	-
지주	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	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(5월)	-
<b>나. 유동성 규제</b>			
은행	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	금융위 의결(4.16)	~'20.9월
	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	금융위 의결(4.16)	~'20.9월
은행	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	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~'21.6월
	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	감독규정 개정(5월)	~'20.12월 신규 취급 대출
산은	NSFR 한시적 적용 유예	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~'21.6월
보험	채안·증안펀드 출자목적 RP 허용	법령해석 발급 (4월)	-
보험	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	-	~'20.9월
여전 저축	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	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~'21.6월
저축 상호	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	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~'21.6월
<b>다. 자산 건전성 규제</b>			
공통	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	법령해석 발급(4월)	-
여전	폐업 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	감독규정 개정(5월)	-
<b>라. 면책 등</b>			
공통	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강화	검사및제재규정 개정(4.16)	-
공통	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	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-
보험	보험 대면채널에 TM절차 허용	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-
여전	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및 산정방식 개선	감독규정 개정(7월)	-
저축	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	비조치의견서 발급(4월)	~'21.6월
정책 금융	적극 위기대응 인센티브 부여	경영실적평가지침 개정(4월)	-